

##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복지·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.

### < 보도내용 >

- 2026.9.16.(수) 오마이뉴스는 「반도체 호황에 정부 곳간 넘쳐도... 2027년 예산안의 참담한 실상」 기사에서,
  - 2027년 총지출은 12.8%, 국세수입은 50% 늘어나는데도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9.3%에 그쳐 지출 “분야 가운데 하위권이며”, “늘어난 돈은 복지로 가지 않았다”고 하면서
  - ❶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에 묶여 있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(6.7%)도 충분하지 않으며, ❷기초연금 개편은 생계급여의 보충성에 따라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동시수급(약 78만명) 저소득 노인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고, ❸고용부문 증가율(3.1%)은 “사실상 제자리”라고 보도하였다.

### < 정부입장 >

- '27년 예산안은 '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'과 '성장 과실의 전 세대·계층·지역 확산'을 양대 축으로 두고 편성하였으며, 늘어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K자형 양극화 완화 및 취약계층 소득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에 두텁게 투자하였습니다.
- 2027년 복지 분야 증가율 9.3%는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\*이며, 증가 규모는 24.6조원으로 내년 총지출 증가분(93조원)의 1/4 이상(26%)을 차지합니다.

\* 복지 분야 증가율(%): ('20) 12.1 ('21) 10.6 ('22) 9.0 ('23) 3.8 ('24) 5.1 ('25) 4.7 ('26) 8.2 (**'27안) 9.3**

- **분야별 증가 규모\***로도 복지 분야는 12개 분야 중 두 번째로 크고, 산업 분야 증가 규모 9.4조원의 **2.6배에 달해** 재원이 복지보다 산업·에너지에 치우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\* 분야별 증가 규모(조원): (일반·지방행정)27.6 **(복지)24.6** (교육)10.8 (산업)9.4

□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**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** 하였습니다.

❶ (기초생활보장) 여러 복지 사업의 **기준선**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물가 상승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**역대 최대인 6.7%로 인상**하여,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**27.1조원(+4.7조원, +21%)**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
- 특히,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지급액을 월 208→222만원으로 14만원 상향하는 한편,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대상 확대에도 투자하였습니다.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국정과제에 따라 현행 32%에서 '30년 35%까지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❷ (기초연금)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의 동시수급자('25년 약 78만명)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.5만원, 2인 가구 기준 9만원 늘어난 생계급여 인상을 통해 **두텁게 지원될 예정**이며, 이는 기초연금 인상액 3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. 이에 따라, 보도와는 달리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**최저소득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납니다.**

- '27년 기초연금 월 38만원을 수급하는 노인 소득하위 30% 대상자는 **약 348만명**으로 전망되며,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수급 노인('25년 약 78만명) 외 생계급여 비대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.
- 또한, 노인 소득하위 45% 이하 저소득 부부감액 비율  $\Delta 20 \rightarrow \Delta 10\%$  인하에 따라, 기초연금 가구 가처분소득 증대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.

\* (하위 0~30% 부부가구) **56만원('26) → 68.4만원('27), +12.4만원 추가지원**  
(하위 30~45% 부부가구) **56만원('26) → 64.6만원('27), +8.6만원 추가지원**

③ (고용) '27년 고용부문 예산은 실업급여 지원을 합리화\*하여 관련 예산이 전년비 감액되며(14.1→13.9조원, △1.2%), 전체적인 증가율은 제한된 모습\*\*이나,

\* 구직급여 지급방식 조정,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 범위 조정

\*\* 실업급여 지원 합리화(△1.5조원) 미포함 시 약 9% 수준 증가

-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'27년 예산안에 청년\*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\*\*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(+22.0%), 창업(+12.8%) 지원 등을 적극 확대하였습니다.

\* (청년) 청년첫취업지원제도 분리·신설하고 지원 강화(16만명, 0.4조원)

\*\* (사각지대)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·건강보험료 신규 지원,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 신설

④ (주택) '27년 주택 부문 예산은 '26년 대비 14.5% 확대된 44.0조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. 특히 공적주택 예산을 금년 대비 8.8조원 확대한 30조원 규모로 편성하여, 올해 대비 2.4만호 확대된 21.8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.

□ 정부는 전통적 복지 확대뿐 아니라,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양극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, 세대·계층·지역·산업 등 K자형 양극화 예산도 대폭 확충(113.9→160.4조원, +46.5조원)하였습니다.

\* (세대) 청년세대에 일자리·주거·자산형성, 혼인·출산·양육 등 성장단계별 지원(28.2→43.3조원)

(계층) 농어민·취약노동자 등 민생 지원(8.0→11.9조원), 취약계층 등 적극복지(59.5→68.4조원)

(지역) 산업·의료·교육·인프라 등 지방 성장거점 지원 및 정주여건 확충(16.1→33.0조원)

(산업) 소상공인 안전망 대폭 보강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매출기반 확충(2.0→3.5조원)

|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예산실 국민복지예산과 | 책임자 | 과 장 | 진민규 (044-214-29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상희 (leet88@korea.kr)<br>김진수 (kimjinsu@korea.kr) |
|       | 고용노동예산과     | 책임자 | 과 장 | 정원 (044-214-253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성택 (lst0215@korea.kr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국토교통예산과     | 책임자 | 과 장 | 박현창 (044-214-27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준성 (jsjohn@korea.kr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